

경제법판례연구회 발표 및 토론회 개최

경제법판례연구회(회장 서울대 권오승 교수)는 3월 11일(금요일) 서울대 호암 교수회관에서 “추정조항 적용요건으로서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차별적 취급에 대한 경쟁법적 분석”에 관한 발표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 주제가 된 추정조항 적용요건으로서 행위의 외형상 일치는 「서울시 지하철 9호선 903공구 및 909공구 건설공사 입찰참가 2개사가 사전에 입찰정보를 교환하였고 미리 수주예정업체를 정해놓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며, 차별적 취급에 대한 경쟁법적 분석은 에스케이텔레콤(주)이 대리점이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스케이글로벌(주)로부터 구입한 단말기에 대해서만 할부채권을 매입하고 삼성전자(주), LG전자(주)로부터 구입한 단말기의 경우에는 채권매입 대상에서 제외한 사건이며, 미국과 EU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성훈 변호사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는 원칙적으로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가격이 일치된 행위라고 인정해야 한다면 공정위가 그 가격이 본질상 동일하거나 담합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의의 입증문제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특히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로서의 입찰 담합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은 가격의 결정, 변경, 유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입찰 둘러리를 정하는 것은 외형상 일치에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13개 골판지원지 제조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제2004-255호), 용인시 죽전과 동백지구내 공동주택 분양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제2004-236호 및 237호) 등 공정위의 기존 심판결 분석을 통해 행위의 외형상 일치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공정위가 13개 골판지원지 제조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서 행위의 외형상 일치에 대한 기준으로 기준가격의 차이를 구매전환가능성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전환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가격차이는 공동행위의 전형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쟁의 전형적인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시장획정시의 통상적인 기준인 SSNIP를 차용한 개념인 구매전환가능성 기준을 공동행위의 결과에 상응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에 관한 기준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용인시 죽전과 동백지구내 공동주택 분양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서는 공정위는 평당분양가의

650만원 이상과 평당 분양가의 700만원 전후 분포를 외형상의 일치로 보았다. 물론 전자의 평당분양가 650만원이라는 가격하한선 합의는 공동행위의 한 유형이나 어떠한 시장에서 최저가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격하한선 합의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처럼 비균질적인 상품시장에서 상품가격은 언제든지 일정한 범위내에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일정한 가격대에 분포한다는 사실은 공동행위의 결과인 외형상 일치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차별적 취급에 대한 경쟁법적 분석에서 명지대 홍명수 교수는 특히 계열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의 경우는 수직적 구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불가피 하나 정당화사유로서 시장전략상의 항변이나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항변의 문제를 검토해야 하고 경영상 필요성은 급박성과 불가피성을 요건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계열사를 위한 차별의 요건으로서 대법원은 계열사를 위한 의도는 특정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사에 유리하게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차별행위의 동기, 그 효과의 귀속주체, 거래관행, 계열회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의 주된 의도가 계열회사가 속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제한적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경제적 동기가 복합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는 명문의 근거 없이 경제력집중 강화 같은 어느 하나에 우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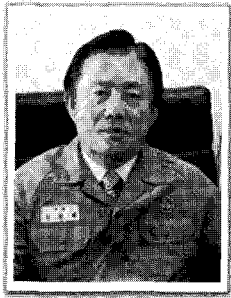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작성

본 연합회에서는 각 회원사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관련 자율준수편람을 업종에 맞게 작성해 드리고 있으니,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작성 계획이 있으신 각 회원사는 상담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본 연합회 준법지원실 TEL. (02)775-8870-2 / FAX. (02)775-8873



회원가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원특수강(주)

대표이사 김 정 원

제조업

경남 창원시 신촌동 65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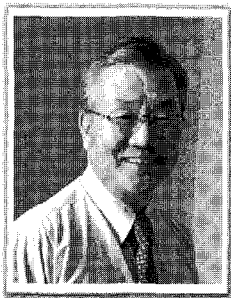


(주)암스트롱 유엔아이

대표이사 이 수 연

도·소매업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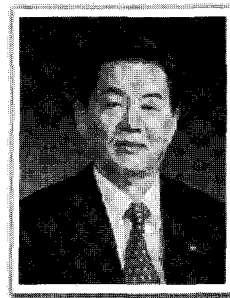


중소기업연구원

원 장 김 인 호

서비스(연구 및 개발업)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회관 6층



대림산업(주)

대표이사 이 용 구

건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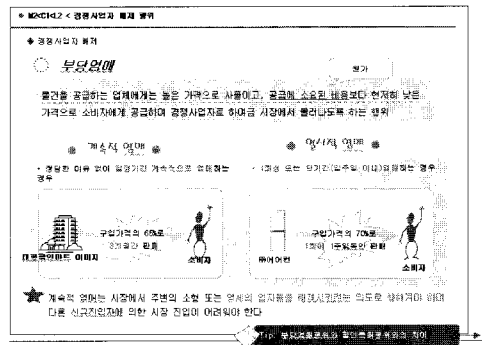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2 대림빌딩

공정거래교육 콘텐츠 판매안내

본 연합회에서는 공정거래법 및 제도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제조일반/유통서비스 2개 과정) 콘텐츠』를 제작하여 기업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공정거래교육 콘텐츠의 주요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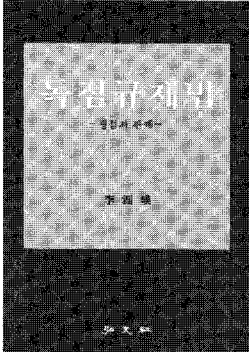
- ▶ 공정거래위원회 전문가 12명의 집필 · 직강
- ▶ 최신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콘텐츠 구성
- ▶ 최신 교수설계기법 적용(Goal based Scenario, Enfortainment 동영상 강의)
- ▶ 고품질 All Flash 형태 및 입체적인 학습설계를 통하여 보다 쉽게 공정거래법 및 제도에 대한 지식 습득
- ▶ 고용보험 적용과정(4주-20일차)으로 구성



❖ 온라인 공정거래교육 콘텐츠 목차

제조일반	유통서비스
공정경쟁과 기업활동	공정경쟁과 기업활동
공정거래법(경품고시 포함)	공정거래법(대규모소매점고시/경품고시 포함)
표시광고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약관규제법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운영	방문판매법
자율준수프로그램(CP)	공정거래법 운영
	자율준수프로그램(CP)

- * 교육내용 맛보기 사이트 : <http://contentsone.co.kr/demo/kfcf/M2/start.html>
- * 자세한 정보는 본 연합회 홈페이지(www.kfcf.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 : 본 연합회 준법지원실 TEL. (02)775-8870~2 FAX. (02)775-8873



독점규제법 - 쟁점과 판례 -

이호영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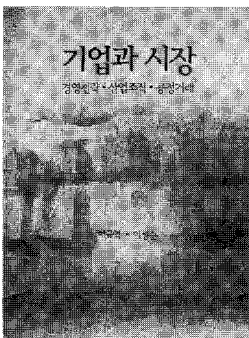
이 책은 기존의 교과서와 전혀 다른 접근방법에 의한 판례 중심의 독점규제법 교과서로서, 법조문 해설 중심에서 탈피하여 실무 및 이론상 문제가 되었던 구체적인 쟁점들을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광범위한 국내외 판례와 학설을 해설하였고, 현행 독점규제법의 정책적 성격과 역사성을 고려하여 각 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을 상세히 서술하였으며, 각 쟁점에 관한 미국·EU·일본·독일의 입법례 및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으로서 직접 독점규제법 관련 행정소송을 담당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말 개정된 법률을 포함한 현행 독점규제법령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최근까지 내려진 약 150여개의 국내·외 중요판결의 판시사항을 요약·해설하였으며, 이 중 특히 중요한 판결(landmark cases) 30개를 엄선하여 판결문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공정거래 관련 실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나 기업 법무팀 관계자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등의 경제법 과목을 심도 있게 준비하는 학생, 그리고 실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학부 및 대학원의 경제법이나 독점규제법 강자 수강생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홍문사 / 27,000원 / 484쪽



기업과 시장 - 경영전략·산업조직·공정거래 -

이규익·이성순 著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축소론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과 때를 같이하여 경영전략, 산업조직, 공정거래에 관한 최근까지의 학문적 연구와 제도운용의 성과를 집대성한 “기업과 시장”이 발간되었다.

이 책은 시장경제의 진화와 기업정책의 전개, 경제력집중, 그리고 기업지배구조를 상세히 다룬 제7편 ‘기업, 시장과 정부’가 특히 눈길을 끄는데, 저자들은 재벌규제의 법제와 논리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을 꼼꼼히 조명하고 있다. 현재 이 제도를 둘러싸고 공정위와 재벌간에 열띤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목은 시사하는 바 크다.

이 책은 경제학, 경영학, 법학을 공부하는 대학생과 정부와 기업의 일반지식인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제의 양면에서 다양한 전략적 경쟁의 본질을 규명하여 기업의 바람직한 경영의 전형을 확립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올바른 정부간섭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적 사기업을 위한 경영전략과 공정거래법 운용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두었고 기업과 기업가의 본질을 규명함과 아울러 네트워크산업, 정보비대칭성, 재산권, 거래비용의 경제학 등 최근 관심이 고조된 분야의 연구성과도 제시하고, 특히 기업지배구조와 재벌 등 한국경제가 현재 직면한 문제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론이나 제도와 관련한 일화, 특히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등 대기업정책의 세부사항의 이면에 있는 역사적 경위와 정치적 고려 등을 적시한 점이다. 이 같은 증언은 저자들이 공정거래법의 제정, 개정, 운용에 직접 참여해온 증인이라는 점에서 생생함을 더하고 있다.

지민사 / 35,000원 / 878쪽